2021년도 지방직 7급 행정학 총평 및 해설

(메가공무원 황철곤 행정학)

1. 출제 난이도와 경향

2021 지방직 7급 행정학은 '중상'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단답형이 아닌 정확한 논리구조를 물어보는 선지가 많았고, 일부 문제들에서는 처음 보셨을 주제와 지엽적 법령도 등장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의 심리적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의 길이도 짧지 않아서 더욱 고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들이었으므로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학 점수는 85점 정도로 보입니다.

행정학의 특성 상 학습범위는 기출의 범위에서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요 주제들에 대한 단순 암기 또는 기출선지의 단순 반복보다는, 주제들에 대한 탄탄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학 시험을 올바로 준비하는 데에 매진한다면, 시험이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더라도 합격점수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출제 유형분석

수험행정학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비교, 논리, 키워드'입니다. 라이벌 개념들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 각 개념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충분한가, 개념과 관련된 키워드를 숙지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개념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선지들에 대한 판단 여부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출제포인트별	
비교	6문제
논리	11문제
키워드	3문제

출제파트별			
총론	1문제	**인사**	4문제
정책	5문제	**재무**	3문제
조직	5문제	**지방**	2문제

3.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 5번 :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 합리모형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
- 8번 : 톰슨이 제시한 기술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조정형태를 비교할 수 있는가
- 14번 : 모건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를 알고 있는가 (최초 출제)
- 18번 :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제도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20번 : 실험의 기본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4. 2022 국가직·지방직 대비 학습법

① 주요 개념은 '비교', '논리', '키워드'의 3박자를 맞춰서 정리해야 합니다.
②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논리적 접근이 선행된 후에 반복 암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행정학은 빈출 파트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전범위의 고른 학습에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철곤 드림 :)

문 1.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 가치는?

① 민주성
② 형평성
③ 능률성
④ 대응성

난이도 : 하

출제논점 : 키워드 (근대 관료제의 최우선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③ O 베버가 주장한 **근대 관료제**는 **산업혁명 시대의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체계로, **철저한 분업화와 공식적 규칙**에 따라 **업무수행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였다.

정답 ③

문 2. 다음은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나)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다)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가)	(나)	(다)
①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②	내부접근형	동원형	외부주도형
③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동원형
④	내부접근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난이도 : 하

출제논점 : 비교 (세 가지 의제설정 모형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가) **내부접근형** : 특정 세력에 의해 **사회문제가 곧바로 정부의제화**되고,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기 때문에 **공중의제화 과정이 생략**된다.

(나) **외부주도형** : **다원화된 민주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사회문제가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중의제로 진행**된 후, 정부가 해결하는 **정부의제로 진행**된다.

(다) **동원형** : 특정 사회문제를 **정부가 먼저 정부의제로** 만들지만, 추후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므로 **공중의제화 과정이 추가로 진행**된다.

정답 ④

문 3.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③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④ 엽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난이도 : 하

출제논점 : 비교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X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대표관료제**이지, 실적주의가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② O 정당에 대한 충성과 공헌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엽관주의는 정치인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 **엽관주의적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③ O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행정국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실적주의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④ O 정치인이 공직자를 임용하는 엽관주의에서는 **정치인이 속한 정당과 공직자가 속한 관료기구가 동질성**을 갖게 되므로 정치인이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하면서 **강력한 국정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답 ①

문 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논리 (예산 분류 방식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기능별 분류**는 **사회복지, 농림수산 등 정부활동이 추구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농림수산과 같은 기능에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이 복합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회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② X **조직별 분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조직별 분류는 **조직 전체적인 예산의 파악에는 용이**하나,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미흡**하므로 **예산지출의 목적을 파악하기에는 불리**하다.

③ O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 농림수산 등 **정부가 추구하는 활동이나 목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능별 분류를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한다.

④ O 품목별 분류는 **투입 항목을 세세하게 분류**하는 것으로, **경직적이고 통제중심적**인 분류 방식이다. 따라서 **신축적인 예산집행에는 불리**하다.

정답 ②

문 5.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정책결정에서 가치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②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가 전제조건이다.
③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봉합을 모색한다.
④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논리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합리모형을 추론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제시문] 제시된 정보는 **합리모형**의 특징들이다. 미래지향적 문제해결과 같은 **이상주의적 결정모형**인 합리모형은 **대안 선택 기준이나 정책의 목표 등이 모두 명확**한 상태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이미 투자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① X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해서 수정·보완**하는 성격은 **현실적인 모형**으로, **점증모형이나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이다.

② X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는 **정책결정자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쓰레기통 모형**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③ X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준해결과 타협을 통한 봉합**은 제한적 합리성을 따르는 **회사모형**의 특징이다.

④ 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모형은 가장 이상적인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정답 ④

문 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난이도 : 하

출제논점 : 정책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X **일부 방송사**에게만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한 후에 **재심사 과정**을 거치는 규제는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혼합적 성격**인 **경쟁적 규제 정책**의 사례이다.

② O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이므로 원칙금지, 예외허용인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더 높다.**

③ O **규제샌드박스**란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전반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취하거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O **고객정치**의 대표적 사례는 **수입규제**로, 이는 **시장의 영역인 수입의 영역에 개입하는 규제**이므로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가정치**는 **환경오염규제** 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환경과 같은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 7.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③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난이도 : 하

출제논점 : 논리 (공공선택이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외부의 **환경이 행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환경접근적 이론으로,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② O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추구했던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흐름으로, 정부가 적절하고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X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한 **독점적 공급보다는 분권화된 조직**에 의한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④ O **역사적 제도주의**는 한 국가 안에서 **누적되어 온 경로에 제도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봄으로써 **환경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정답 ③

문 8.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②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사전계획, 예정표

③ 연속형 기술(long-linked technology)－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④ 중개형 기술(mediating technology)－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규칙, 표준화

난이도 : 상

출제논점 : 비교 (톰슨이 분류한 기술에 따른 조정 형태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④ O 톰슨은 **상호의존성에 따라 기술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상호의존성이 가장 낮은 중개형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은 **기계적인 조직구조**가 적합하고, 이에 따라 **규칙과 표준화와 같은 기계적인 조정**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기술 분류	상호 의존성	조정 형태	불확실성 감소 방안
집합적 상호 의존성	**중개형 기술**	낮음	**규칙, 표준화**, 예정표	서비스 대상의 확대
연속적 상호 의존성	**연속형 기술**	중간	정기회의, 계획, 수직적 의사전달	수직적 통합
교호적 상호 의존성	**집약형 기술**	높음	부정기회의, 상호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전문지식·기술 습득, 처리대상의 조직내 유입

정답 ④

문 9.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논리 (고충처리제도의 체계와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② O

동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O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동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⑦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X 고충심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는 것은 맞으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동규정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정답 ④

문 10.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②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④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논리 (정책집행연구 1세대가 집중했던 지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정책집행의 중요성을 인지**한 1세대 정책집행론자들로, 적은 참여자의 수처럼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② X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정책이 결정된 대로 집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③ O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해야** 정책이 결정된 바대로 집행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보았다.

④ O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가 **주도적으로 집행을 일관적으로 이끌어야** 정책이 결정된 바대로 집행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②

문 11.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O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O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O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인사기관의 구성방식을 통해서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비교 (인사기관 중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제시문]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행정수반의 관리**를 받고(**비독립**), **인사기관의 장**이 집행(**단독형**)을 하는 유형은 비독립단독형의 인사기관이다.

① X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형 인사기관**의 특징이다.

② X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정책을 펼칠 수 있는 **독립형 인사기관**이다.

③ X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단독형이 아닌 합의형** 인사기관의 특징이다.

④ O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므로 **단독형**이 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므로 **비독립형**이 되므로, **비독립단독형**에 대한 설명이 된다.

정답 ④

문 1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②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 막료를 제시하였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④ 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난이도 : 하

출제논점 : 논리 (허시와 블랜차드가 제시한 리더십의 순서를 이해하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균형성과표**는 기존 **재무 중심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고객, 내부 프로세스, 재무, 학습과 성장의 네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측정한다.

② O **민츠버그의 조직성장경로모형**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직의 5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강조된다고 보는데, **전략적 최고관리층(전략), 중간계선관리층(중간관리), 작업층(핵심운영), 기술구조, 지원막료(지원스태프)**가 그것이다.

③ X **허시와 블랜차드**가 주장한 **생애주기이론**의 상황변수가 **부하의 성숙도**는 맞으나, 리더십의 유형은 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지시→설득→참여→위임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성숙도가 높다면 참여형이나 위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④ O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반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효율적인 대량생산을 위한 **철저한 분업과 규칙에 의한 조직 운영**을 강조하였다.

정답 ③

문 13.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비교 (지방분권화와 중앙집권화의 목적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각 도시의 내생적이고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적 중앙집권화보다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생적 노력**이 중요하다.

② O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이 **지방분권화**가 된다.

③ X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분권화보다는 중앙집권화**가 적합하다.

④ O **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와 경쟁**이 중요하므로 독점적인 **중앙집권화보다는 지방분권화**의 확대에 적합하다.

정답 ③

문 14.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Culture)

②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

③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Prison Metaphor)

④ 흐름과 변환과정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Flux and Transformation)

난이도 : 상

출제논점 : 키워드 (모건의 조직에 대한 여덟 가지 시각을 알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② X **모건**은 **8가지 은유**를 통해 조직을 이미지화했다. '기계장치, 유기체, 두뇌, **문화**, 정치체제, **심리적 감옥**, **끊임없는 변환 과정**, 지배도구'가 **모건이 제시한 조직을 바라보는 여덟 가지 시각**이며,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 ②

문 15. (가)~(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가)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나)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다)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라) 년이다.

	(가)	(나)	(다)	(라)
①	10	3	10	1
②	5	3	10	3
③	5	5	20	1
④	10	5	20	3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키워드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요 숫자들을 알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가) **5**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본적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한다.

(나) **3**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3월 31일**이다.

(다) **10** :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4월 10일**이다.

(라) **3** : **21년도**에는 22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며, **22년도에 집행**을 하고, **23년도에 결산**을 하므로 **3년에 걸쳐 예산주기가 반복**된다.

정답 ②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키워드 (공직자윤리법상 주요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X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간(3년 X)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원칙적으로 **3년간(5년 X)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③ O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O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처리)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문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난이도 : 하

출제논점 : 논리 (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O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배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4가지이다.

② X 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경비를 보조해 주는 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국고보조금**이다.

③ X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조정제도이다.

④ X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의존재원**이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악화**된다.

정답 ①

문 18.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논리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X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도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O

> 동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O

> 동법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④ O

> 동법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①

문 1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논리 (각종 예산제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① X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적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닌 **조세지출예산제도**이다.

② O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서 실시하며, **국회 의결**이나 중앙관서장의 신청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X 예산 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동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X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면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 동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 20.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 없이 진행할 수 있다.

ㄴ.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ㄷ.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ㄹ.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난이도 : 중

출제논점 : 논리 (실험의 특징을 정확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해설 및 정답

ㄱ X **실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실험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통제집단**이 있어야 한다. **통제집단이 없다면** 실험이 아닌 **비실험**이다.

ㄴ X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된 실험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같다고 할지라도, 실험실에서는 정책효과가 있으나 일상에서는 정책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이를 **진실험에서 발생하는 외적 타당성 위협요인인 호손효과**라고 한다. 즉 진실험에서는 호손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손효과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ㄷ O **실험을 하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도 실험이 활용될 수 있다.

ㄹ O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동질성 확보가 가능하면 진실험**이 되지만, 무작위 배정을 하지 못해서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준실험**이 된다.

정답 ④

//끝//